

행 정 학

해설위원 : 김덕관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④	①	③	②	③	③	①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④	③	②	③	①	②	③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2	재무이론	3
정책이론	5	행정부류	1
조직이론	3	전자정부론	1
인사이론	3	지방자치론	2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8	신개념문제	2	100점 방지	0
------	----	-------	---	---------	---



실질적인 만점: 100점

고득점: 95점 이상

분발대상: 80점 이하

올해 국가직 9급 시험보다 쉬운 난이도입니다. 중요한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어도 18문제, 9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구성입니다. 제가 신개념문제로 분류한 문제도 한 문제는 선지 2개가 기출되었던 내용이며 나머지 2개도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었고, 나머지 한 문제는 제가 강의 시간에 그동안 기출되었던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나올 때가 되었으니 대비해 두라고 했던 개념이 3개의 선지로 출제되어 이 3개를 소거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절대 예측불가능하며 아주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점도 가능한 시험이었고, 신개념문제도 요령껏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고득점 기준은 95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부분에서 2문제 이상이나 틀려 80점 이하인 경우에는 기출문제 회독이 요구되는 분발대상입니다.

▶ 문제 및 해설

0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회가 확정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재무이론 공부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죠?

④ (×)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0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 ① 진입규제
- ② 환경규제
- ③ 산업재해규제
- ④ 소비자안전규제

<해설>

정답: ①

경제적 규제는 시장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입규제는 어떤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시장경쟁을 위한 규제입니다. 시장경쟁과의 관련성이 너무 추상적이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돈 뽀새를 말아서 구분하기로 했죠? 열심히 돈 모아서 주유소를 하나 차렸더니 바로 앞에 주유소 허가가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젠장이지요? 진입규제로 경제적 이익 정도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 ① (○) 진입규제는 어떤 산업에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산업의 적절한 경쟁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 ② (×) 환경규제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규제이다.
- ③ (×) 산업재해규제는 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필수화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위한 사회적 규제이다.
- ④ (×) 소비자안전규제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의 안전상 문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이다.

0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 ④ 부서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해설>

정답: ③

강의 때 분업의 원리를 통한 부분최적화는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최적화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고 엄청 강조 드렸습니다. 부서 간에 업무를 잘게 쪼개어 분담하여 수행했다면 이제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을 통해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겠죠? 제 강의 듣고 이 문제 틀렸으면 저 울 겁니다.

③ (×) 분업의 원리는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한 부서 혹은 한 사람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업무만 수행하므로 그 업무에 대해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업의 원리를 통한 부분적인 전문화는 다른 조직구성원 및 다른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으로 통합될 때 의미가 있다.

0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 제안 규정」 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해설>

정답: ②

보상시스템의 기본은 돈이죠. 제안제도도 우수한 제안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기본입니다. 소청심사제도에 관하여 ②번은 소청심사제도의 개념 그 자체이니 옳은 선지이고, 실전에서는 ②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선지와 관련한 Tip을 드리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중앙정부 단위의 “인사”제도이니 인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 소속입니다. 중앙정부 단위의 인사기능과 관련된 기관은 당근 인사혁신처 소속이겠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사람 중심(계급제의 특징)과 연공 중심(근무기간 중심)이라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면 기초부족입니다.

- ① (×) 공무원 제안제도는 우수한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③ (×)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성과 중심 보수체계이다.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②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③ 환경영향평가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해설>

정답: ③

이 문제는 3개월 전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문제 똑바로 풀어 봤는지 확인하는 문제인가요? 사회복지직과 문제 및 옳은 선지 3개는 똑같고, 틀린 선지만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로 바뀌어 있네요. 거저 잘 받아 먹겠습니다.

③ (×) 환경영향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0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 (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③

①번 같은 내용이 틀린 선지로 나오는 것 본 적 있나요? 던(Dunn)이 어떻게 분류했는지 말든지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③번을 보고 ‘아 수박(과일 이름입니다)!! 문제구조화와 관련된 4가지 단계 외운 적 없는데...’라고 탄식하면 안 됩니다. 문제구조화는 추상적인 정책문제를 구체화시키는 단계자나요... 중간에 문제의 ‘추상화’이 부분을 틀렸다고 골라내면 되겠네요.

③ (×) 문제의 구조화란 추상적인 정책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체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다.

② (○) 구조화가 잘된 문제는 구체적으로 잘 파악된 문제라는 것으로 표준운영절차 등을 활용한 기계적인 방식인 전통적인 (conventional) 방법으로 분석해도 충분하다.

0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해설>

정답: ①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방법은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면 결정된 내용의 기계적 집행을 위한 단순한 조직구조가 필요하겠네요. 정책집행현장에서 각종 문제점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복잡한 조직구조가 필요합니다.

- ① (×)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방법은 결정된 내용의 기계적 집행을 위한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정책집행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상황식 접근방법이다.
- ② (○)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결정된 내용이 기계적으로 집행되기 용이하여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 ③ (○) 특정한 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그 집단이 해당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 ④ (○)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정책과정이 안정적이고 성공가능성이 크다.

0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②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집행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③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 ④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해설>

정답: ②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입법부가 법률 제정을 하고 사법부가 사법적 판단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흥!

- ② (×)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가 법률로 규정된 정책을 집행하며, 사법부가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0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른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우리가 항상 두문자 '노기성수보유선'으로 암기하고 있었던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의 핵심 내용이네요.

노력 ⇨ 성과(실적) ⇨ 보상 ⇨ 선호(주관적 가치)

기대치 수단성 유인가

이거 외우지 않고 시험장 가신 분 없으시죠?

- ④ (×)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기대치(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인가(valence)가 높을수록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균형성(balance)과는 관계없다.

10. 「공무원 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 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적을 반영하여 책정된다.
-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해설>

정답: ①

행정학에서 '모든',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죠? 행정현상 및 행정규정에는 거의 대부분 예외가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옳은 선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틀린 선지입니다.

- ①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중 별정직 공무원 등 개별법에서 보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속도(velocity)
- ② 다양성(variety)
- ③ 크기(volume)
- ④ 수동성(passivity)

<해설>

정답: ④

정보기술 중에서 앞으로는 '빅데이터'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 밖에 출제될 게 없고, '빅데이터'가 출제되면 반정형적 혹은 비정형적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점과 3대 특징으로서 속도, 다양성, 크기 밖에 없다고 강조 드렸었죠? 아... 작두를 타야하나... 농담이고요. 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시 행정학에 대한 밤낮 없는 연구결과일 뿐입니다.

- ④ (×)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크기(volume)로, 3V라고도 한다. 수동성(passivity)은 빅데이터와 관계없다.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②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 ④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해설>

정답: ④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은 도대체 뭐지?’라고 고민에 빠지지 말고 넘어가면, ④번이 제발 자기를 답으로 골라달라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분업은 기계적 구조의 원리인데 ④번에는 유기적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적혀 있는데요.

- ① (○), ② (○) 아담 스미스(A.Smith)는 다음과 같은 분업의 세 가지 장점을 제시했다. 첫째, 노동자는 분업을 통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노동자들의 작업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전문화된 노동자들은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구나 기계를 발명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 ③ (○) 분업이 고도화되어 구성원들이 기계처럼 한 가지 업무만 수행하면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 ④ (×) 분업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기계적 구조의 원리이다.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유지되기 어렵다.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①

일단 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3년 연속 최하등급이라고 민영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캐치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이 충분하지 등 민영화에 적합한 공기업인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매우 쉬운 다른 선지 3개를 소거해서 풀면 됩니다.

- ② (○), ④ (○) 공기업을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민영화는 공공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효율적인 민간기업의 원리로 운영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공기업을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을 확충할 수도 있다.
- ③ (○) 공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이용료를 증가시키거나 이용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줄이기 때문이다.
- ① (×)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민영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14.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이 문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규정에 없는 것이 틀린 선지입니다. 하지만 ‘완전순수기차’, 즉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로써 암기하고 있는 전대차관, 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기금, 차관물자대를 소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나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를 ‘전대차관’이라고 통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 ④ (×)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완전성)의 원칙이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차관물자대가 있고,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 ②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③ 교차기능조직(cross-cross organization)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 ④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정답: ③

엄청 어려운 문제 같지만, 출제의도는 교차기능조직이 내부통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매번 출제되던 패턴입니다. 길버트(Gilbert)의 행정통제 유형 분류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출제되는 매우 가성비 높은 이론이라고 강조 드렸었죠? 또 나왔네요. ‘①번의 독립통제기관은 뭐지?’라고 생각했다가 내용보니 감사원 같은 기관이라는 건 바로 캐치하셨죠? 혹시 캐치 못했어도 바로 넘겨 버리면 문제는 ③번 선지에서 쉽게 풀립니다.

- ③ (×)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 행정 내부의 기관이다. 따라서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보는 순간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외도는 '조세법정주의'라는 것을 떠올리셨나요? 자치재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조세법정주의라고 엄청 강조 드렸었죠?

- ① (○)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세율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변경권한 또한 법률로 규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세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제도이다.
- ②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 우리나라는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재정사업투융자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④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을 위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제 눈을 의심한 유치한 문제네요. 지방교부세의 종류 4가지는 필수 암기사항인 것 아시죠?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

- ①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개별소비세의 20%이다.
- ③ (×)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 ② (○), ④ (○)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또는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할 수 있다.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 ②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 ③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 ④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이 문제가 사실은 100점 방지용 문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조직의 배태성과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주 어려운 논의이고,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제도주의의 중요한 내용 중 아직 안 나온 내용으로서 제도적 동형화에 대해 대비해 두라고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100점 방지용 문제'가 아닌 '신개념문제'로 분류하였습니다. 제도적 동형화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핵심개념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제도적 동형화에서 3개의 선지가 출제돼서 이를 소거하면 조직의 배태성을 물어본 ①번을 틀린 선지로 고를 수 있습니다.

- ② (○)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핵심개념으로, 제도들이 서로 닮아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 ③ (○) 제도적 동형화에는 외부로부터 강압적으로 이식되는 강압적 동형화, 다른 제도를 따라하는 모방적 동형화, 어떤 제도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기 때문에 도입하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 ④ (○)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되어 조직들이 서로 유사해지는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조직 유형으로부터 오는 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
- ① (○)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이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핵심개념으로, 조직의 외부에 사회적 환경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은 조직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도 사회적 정당성에 따른 행위가 나타난다.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② 「정부기업예산법」
- ③ 「예산회계법」
-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해설>

정답: ②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특별회계를 물어보면 '책우예양달'이라고 암기했었죠? 책임운영기관,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이죠. 이 문제는 반대로 물어봤을 뿐이네요.

- ② 책임운영기관,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된다.

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정답: ③

반가운 문제네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직업관료의 차이는 행정학 배울 때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내용인데요. 주로 선출직 관료와 임명직 관료라는 용어를 써서 배웠지만, 용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도 출제의도는 똑같다는 것 보이지요?

③ (×)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직업관료는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